

##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

이애란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지난 1998년 이후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부터는 매년 1,000명이 넘는 주민이 2006년부터는 2,000천 명이 넘는 수가 매년 입국하여 2009년 9월 현재 17,134명에 이르며 서울에 31%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국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는데 2002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아동, 장년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시급한 형편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정착과정에서 공통적인 어려움 외에 임신, 출산과 육아, 가사 등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으며 여성들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아 남성과는 다른 여성들만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목 차

1. 서론
2. 북한이탈주민여성의 현황
3. 북한이탈주민여성 정착 지원 법 제도
4. 일반적 실태 및 가족생활
  - 가. 일반적 실태
    - 나. 결혼생활
    - 다. 자녀관계
    - 라. 사회생활
    - 마. 경제활동
    - 바. 차별경험
5. 보건·의료 및 복지실태
  - 가.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 나. 복지실태
6. 조기정착 지원방안
  - 가. 정착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 나. 정착지원정책의 제·개정 및 기타 관련법 정비 필요
  - 다. 조기정착 지원방안

## 1. 서론

-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부터는 매년 1,000명이 넘는 주민이 2006년부터는 2,000천 명이 넘는 수가 매년 입국하여 2009년 9월 현재 17,134명에 이르며 서울에 31%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과거에는 입국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는데 2002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80%에 육박하고 있음.
  - 최근의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아동, 장년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통일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서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여성은 정착과정에서 공통적인 어려움 외에 임신, 출산과 육아, 가사 등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으며 여성들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아 남성과는 다른 여성들만의 정착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제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한 연구나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북한이탈주민 전반에 대한 연령별, 지역별 분포 현황이나 이들의 경제생활 여부, 건강상태 등 관련 자료에 성별 요인에 따라 구분한 현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정책수립이나 지원은 성인지적 시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2. 북한이탈주민여성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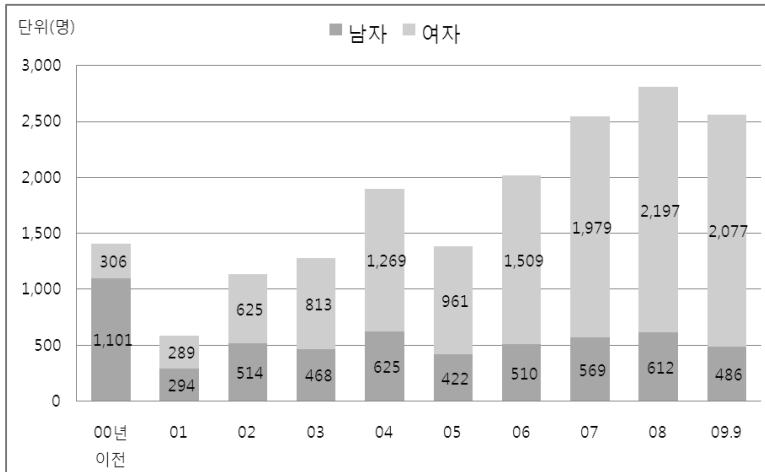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9월 현재까지 총 17,13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중 여성입국자 수의 증가로서 2009년 9월 현재 전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중 여성이 67%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성비(2009.9월 기준)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을 보면, 서울(31%)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24%), 인천(9%)으로 북한이탈주민의 62%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63%)이 남성의 비율(37%)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2> 북한이탈주민 성별 입국자 수('09.9 기준)



**탈북여성 비율 80% 육박... 가족단위 탈북 증가 따라 여성, 아동, 장년층 비율 증가 추세**

- 자치구별로는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되어 있고, 송파구, 중랑구, 강남구 등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입국유형의 특징을 보면, 2008년 5월 현재 청·장년층(20~

북한이탈주민,  
서울(31%)에 가장 많이  
거주, 경기(24%)  
인천(9%) 순...  
62%가 수도권에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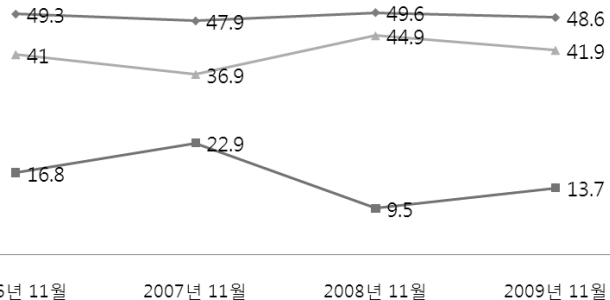
49세)이 전체입국자의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가족단위의 입국으로 인해 2009년 9월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2009년 1월에 비해 매우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를 보면, 주택지원 정책에 의해 공공임대가 52%로 가장 높고, 월세 29%, 기타 12%, 전세 5%, 자가 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택문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재북시 직업유형을 보면, 무직부양이 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동자가 40%로 높았으며 관리직 내지 전문직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노동자와 무직부양이 비율이 각각 42%와 39%로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자와 무직부양의 비율이 각각 38%, 52%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임.
- 학력별로 보면, 고등중학교 학력 소지자가 70%로 가장 많고, 전문대학 학력 소지자가 9%,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8%로 대부분이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 이상의 학력은 남성(11%)으로 여성(6%)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참가율은 48.6%, 실업률 13.7%, 고용률 41.9%로 나타남.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0.1%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4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6.4%로 높게 나타남. 반면 실업률의 경우에는 남성의 실업률이 15.5%로 여성의 실업률 12.6%보다 높게 나타나고, 20대와 50대의 실업률은 20%대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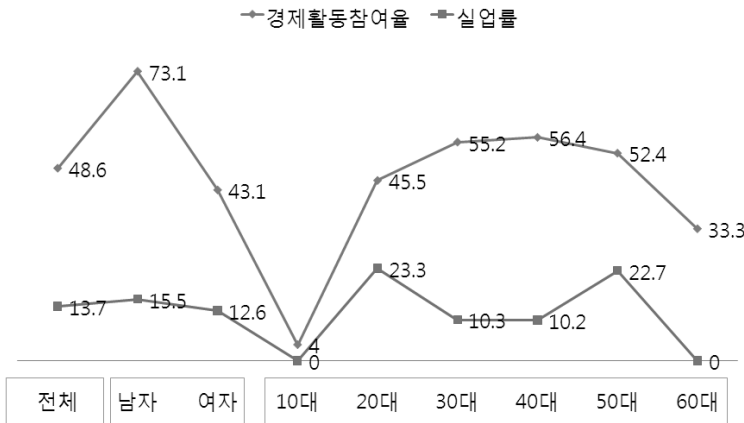
<그림 3>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출처: 통일부 보고서, 2009

<그림 4> 성별 경제활동 현황



- 성별에 따른 비경제활동 이유로는 남성은 ‘통학’이 4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취업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해서’가 각각 21.2%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몸이 불편해서’가 38.4%로 가장 높고, ‘육아’가 23.5%로 나타나 비경제활동이유에 있어 남녀 간 차이를 나타냄.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 전체를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일반국민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취업률이 모두 낮은 반면에, 실업률은 일반국민의 실업률보다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27만 원이었으며, 150만 원 미만이 전체비율의 72.7%로 나타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조사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50~100만 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생활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취업률  
모두 낮아... 실업률은  
일반국민 보다  
4.3배 높아**

### 3. 북한이탈주민여성 정착지원 법 제도

-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정착지원을 위한 법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차 개정예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동법은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북한이탈주민,  
정부보조금 포함  
50~100만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아  
경제생활 악화 추세**

-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해외 또는 국내에 있으면서 보호신청을 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배제되는 점
  -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지 못하는 정착지원법 체계상의 문제
  - 정부기관 중심의 전달체계의 문제
  - 교육이 획일적이고 단절적이며, 공급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문제
  - 취업관련 조항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정착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통일부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 협의 및 조정,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관련 사항 심의기구로 1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단계별로 보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소속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거주지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음.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초기에는 하나원에서, 거주지 편입 후에는 하나센터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음.
  - 정착지원금으로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정착가산금, 고용지원금이 지급되며 북한이탈주민이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금이 지원됨.
  - 또한 취·창업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제 등 취업지원, 생계비, 의료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지원,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제, 정주도우미 등 각종 거주지 보호 및 민간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짐.

## 4. 일반적 실태 및 가족생활

### 가. 일반적 실태

-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출신지역은 ‘함경북도’가 61%로 가장 많으며 연령별로 볼 때 30대 이하 연령층이 4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함경북도’ 응답률이 높음.
-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이 59.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문

- 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등의 순으로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 욕구, 재북 시 직업경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요구됨.
- 현재 가족구성은 ‘독신가구’와 ‘부부+자녀’가 각각 34.3%와 3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본인+자녀’, ‘부부로만 구성’, ‘부모+본인+형제·자매’, ‘형제·자매’, ‘부부+나의 형제·자매’ 등의 순으로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월평균수입이 2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95.8%로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과 거주기간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창업 정책이 필요함.
  - 현재 응답자의 60.3%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 자택, 학교기숙사, 공동체 쉼터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거형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구성은 ‘부모님+본인+형제·자매’가 3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29세 이하의 저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남. 50세 이상에서는 독신가구가 많거나 본인+자녀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의 경제적 생활지원이 요구됨.
- 탈북시기 및 입국시기로 볼 때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은 평균적으로 3~4년간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남한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체류국가에서의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예측할 수 있음.
- 남한 입국형태는 ‘단신’이 전체 응답자의 4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일부’, ‘가족전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배우자 국적별로는 중국/외국인 출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북한출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단신’, ‘가족일부’가 입국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이 먼저 입국하여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남한 입국 시 94.1%가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체류기간 동안에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정신적, 보건·의료적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법에 외국 체류  
탈북자 보호나 지원 내용  
없어 문제**

학력 높을수록,  
거주기간 길수록  
소득수준 높아...

학력과 거주기간 고려한  
맞춤형 취업·창업 정책  
절실

- 입국 전 체류했던 국가는 ‘중국’이 90.3%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국 전 해외체류 경험자의 59.1%가 해외 체류 시 직업이 ‘없었다’고 응답하여 북한이탈주민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분보장을 위해 중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향을 예측할 수 있음.
- 정체성은 ‘남한사람’이나 ‘탈북한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4.8%로 ‘북한사람’이나 ‘탈북한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4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은 탈북자라는 선입견,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개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응답자의 77.4%가 남한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해외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남한사람과 탈북한 남한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72.1%가 현재 거주지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7%가 ‘있었다’고 응답함. 그 이유로 30대 연령층은 ‘좋은 직장을 찾아서’가 52.6%로 다소 높고, 40대 연령층은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응답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친척이나 친구를 따라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외이주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응답자의 27%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전문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이 고등학교/중학교 졸업 이하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이전 의향률이 높았으며,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전 의향률이 높게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여성이 자녀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나. 결혼생활

- 현재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자’가 41.5%로 가장 많으나, ‘미혼’, ‘사별’, ‘이혼’, ‘별거’로 단독가구이거나 한부모가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음.
  - 현 배우자와의 결혼은 재혼인 경우가 전체응답자의 38.4%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중국/외국 출신일수록, 해외체류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재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유형은 북한에서 결혼해서 함께 온 경우가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결혼을 했지만 탈북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탈북해서 가정을 이루는 등 복잡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탈북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정갈등, 갖은 해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결혼 지속기간은 10년 미만이 48.7%로 짧고, 이혼/별거/사별의 이유로는 ‘성격차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양이 무 부족’, ‘학대와 폭력’, ‘탈북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갈등’, ‘부정한 행위’, ‘신체/정신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해체 가정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상담소 등의 개설이 필요함.
-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은 탈북여성 본인이 53.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북한이탈주민여성이 한부모가정의 가구주로서 또는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한 생활의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5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외로움’, ‘문화차이’, ‘편견과 차별’, ‘자녀교육’, ‘부부갈등’, ‘가족갈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연령별, 결혼 상태별, 학력별, 거주기간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 즉, 저연령층일수록 ‘편견과 차별’의 응답률이 높고, 30대, 40대의 경우에는 ‘자녀교육’, 50세 이상의 연령층은 ‘외로움’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결혼 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인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 이혼/별거인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의 응답률이 높아 연령별, 결혼 상태별, 학력별, 거주기간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이탈주민여성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언어적 폭력만이 아니라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등으로 가정폭력양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탈북자라는 선입견,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남한  
사람들 태도로 대부분  
정체성 혼란 겪어*

### 남한 생활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

59.6%로 가장 높아...

'외로움', '문화차이',

'편견과 차별',

'자녀교육', '부부갈등'

등 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가정폭력예방 등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

- 북한가족과의 연락빈도는 '전혀 만나지 않음'이 53.5%로 과반수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남한에서의 경제생활정도가 북한가족과의 연락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86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볼 때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고,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북한 또는 제3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는 응답자는 63.6%였으며 이 중 '형제·자매'가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북한 또는 제3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성별은 '남성' 45.2%, '여성' 52.8%였으며 이 중 남한 이주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남. 해외체류기간 동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성매매 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여성들의 인권침해문제, 신분보장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지원책이 필요함.

### 다. 자녀관계

- 북한에서 임·출산한 자녀, 제3국에서 임·출산한 자녀와의 동거비율은 각각 47.8%와 51.4%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출산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2.2%가 '있다'고 응답함.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이미 적절한 수의 자녀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높았으나 양육과 교육비의 부담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은 36.9%였으며, 대체로 자녀수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자녀의 보육은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나 상당수는 주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본인이 항상 자녀를 데리고 다니거나 혼자 내버려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또는 배우자'를 통한 보육 응답률이 높음.

- 방과 후 취학 자녀를 돌보는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이 혼자 지냄’이 39.8%로 가장 높았고, 방과 후 자녀학습 지도자에 대해서는 ‘없음’이 33%로 가장 높아 방과 후 교실 등을 활용해 이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생활에의 적응정도는 부적응(전혀 적응하지 못함, 별로 적응하지 못함)이 21%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국적별로 볼 때 북한출신 배우자와 중국/외국출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남한출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자녀의 생활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적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45.5%로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교육방식’, ‘교사와의 관계’, ‘의사소통’, ‘학업 내용’, ‘많은 준비물’, ‘교육기관의 규칙과 지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평균 32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북한이탈주민여성의 가구 월 소득을 생각할 경우 자녀양육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자녀양육이 곧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음.
- 자녀양육의 애로점으로는 ‘사교육비 부담’의 응답률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과 후 돌보기’, ‘탈북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숙제 도와주기’, ‘아이와 의사소통이 안 됨’ 등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심층면접결과,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은 자신이 성장한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아이들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등 자녀양육 및 교육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부족한 과목에 대한 학습지원’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방과 후 수업지원’, ‘외국어 지원’, ‘여가활동 지원’, ‘학교 진학’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자녀가 학원을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이었으며 다니고 있는 학원 종류는 ‘어학 학원’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학원을 보내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과반수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자녀의 학원 수강 여부가 자녀들의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함으

**북한이탈주민여성의 가구 월 소득중 자녀양육비 평균 32만원으로 큰 비중 차지...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대다수의 경우  
숨겨...연변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보면, ‘자녀와의 친밀함’, ‘자녀와의 대화 의 사소통’, ‘부모자녀간의 믿고 이해하는 정도’, ‘자녀들이 본인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정도’는 평균 이상을 나타냈으나,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임.

**라. 사회생활**

-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한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였으며, 친한 이웃의 수가 4명 이하인 비율이 전체의 68.3%를 차지하여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친한 이웃을 국적별로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응답이 92.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적극적 교류를 통한 사회적관계망 구축지원이 필요함.
- 모임/활동 참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 ‘북한 친구나 단체 모임’의 경우는 비교적 참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나의 가족·친척모임에의 참여’ 비율은 50% 이하로 낮은 참여율을 보임.
- 도움이 되는 모임과 활동에 대해서는 ‘북한 친구나 단체 모임’의 응답률이 다른 모임 및 활동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여 자조 집단의 육성 및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남한에서의 대선·총선 투표경험과 지방선거 투표경험에 대해서 ‘투표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58.7%, 45.3%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지역사회참여나 지지망을 조사한 결과, 정서적 지지의 경우 4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물질적 지지의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의 이웃과의 적극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알리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3%가 ‘땀땀하게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람을 만난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숨기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북에서 왔다고 말하거나, 밝히지 않거나, 연변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와 이웃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급상황 시 내가 모르는 이웃이더라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대화하고 싶을 때 동네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등과 같은 정서적 지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마. 경제활동

### 1) 취업상황 및 직업

- 전체 응답자의 81%가 북한에서 취업경험이 있었으며, 북한에서의 직업은 '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장원', '직장관리자', '기술자', '노동자(광산/건설/일반)', '교원/대학교수', '예술인/체육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북한이탈주민여성의 41.8%가 '취업'중으로 '음식점 종업원'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사무직/일반기술직', '공장노동자', '가정부/파출부', '기타 육체노동자', '자영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경로는 전단지나 북한친구를 통해서가 가장 많으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종교단체를 통한 구직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인맥이 아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여성의 고용형태는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가 절반이상 차지하며, 월평균 수입이 15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여성이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업무만족도에 있어서도 5점 만점에 3.19점으로 낮게 나타나 근로환경개선, 적합직 종선택, 임금문제 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

**북한이탈주민여성의  
41.8% '취업'...  
'음식점 종업원' 비율  
가장 높고,  
'판매/서비스직',  
'사무직/일반기술직',  
'공장노동자',  
'가정부/파출부' 순**

**정부 지원 직업훈련****참여경험자 중 43.7%만****취업에 도움 응답...****직업훈련교육의 내용과****방법에 문제 있는듯**

-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집안일을 하면서 직장 일을 병행하기’가 2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기’가 24.7% 등으로 나타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취업을 한 경우는 유배우자 응답의 68.4%였으며, 배우자의 직업유형은 ‘건설노동 단순 노무자’가 2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장노동자’, ‘기능/숙련공’, ‘사무직/일반기술직’, ‘자영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취업중인 이유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느라’, ‘자녀양육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저연령층일수록 ‘학업을 계속하느라’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응답률이 높고, 고연령층일수록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아 취업지원정책이 일괄적이기보다는 연령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 28.2%가 직업교육이나 취업지도를 이야기하였으나, 전체 응답자의 43%만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낮은 수준의 참여를 보임. 또한, 직업 훈련 참여경험자 중 43.7%만이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직업훈련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희망하는 직업훈련 내용으로는 ‘컴퓨터 관련 교육’이 6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요리사 교육’, ‘이/미용 기술’, ‘간호사’, ‘간병인 교육’, ‘제과/제빵 교육’, ‘보육관련 교육’, ‘네일아트’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연령별, 남한거주기간별,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직업훈련교육 시 나이, 학력, 학습능력과 취향, 전직경력, 자격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바. 차별경험

- 응답자의 63.1%가 남한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31.6%가 차별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남. 차별시정요구기관은 시민단체 또는 종교기관이 32.9%로 가장 많아 현재 이들의 차별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차별시정 절차나 구제기관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상담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차별경험정도는 ‘직장에서의 차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곧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므로 직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직장·학교 등 북한이탈주민 삶의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시 됨.

## 5. 보건·의료 및 복지실태

### 가.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 북한이탈주민여성의 건강상태는 ‘나쁘다(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가 37.6%로 ‘좋다’는 응답 15.7%에 비해 높게 나타나 건강상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더욱이 지난 1년간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증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30.8%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았음.
  - 치료 포기 이유로는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함.
  - 또한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응답자의 50.7%로 해외체류기간이 길수록 질병이 있는 정도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정착 초기부터 건강에 관한 개입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63.1%가 남한사회에서  
차별 경험...  
차별시정요구기관은  
시민단체 또는  
종교기관이 가장 많아*

### 나. 복지실태

- 사회정착을 위한 적응교육을 제외하고는 복지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관련 도움을 받은 정도는 ‘취업·창업 정보제공’, ‘지역사회민간단체와 연결’,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 ‘가정방문 등의 상담’, ‘지역시설 이용안내’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여성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원인분석과 다양한 방안 도입을 통한 이용활성화가 필요함.

- 또한 남한거주 기간별로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종류나 방안이 다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북한이탈주민여성의 4대 보험 가입률의 조사결과, 건강보험이 32.6%, 산재보험이 16.8%, 국민연금이 16.0%, 고용보험이 15.5%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여성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는 자는 63.8%,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자는 73.7%로 나타남.

## 6. 조기정착 지원방안

### 가. 정착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 패러다임의 전환: ‘보호’에서 ‘자립·자활’로
- 성인지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여성의 현실을 고려한 총체적 정책 수립
-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자원, 욕구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의 다원화
-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취업·창업 지원
-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쌍방향적 정책 진행
- 분권화된 생활밀착형 지원
  - 정착지원이 정부주도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 확대
  - 민간단체의 참여와 활동의 활성화
- 북한이탈주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 건강 및 자활 프로그램 구축

**나. 정착지원정책의 제·개정 및 기타 관련법 정비 필요**

- 중앙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자치구 중심으로
-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각 지자체에 북한이탈주민 전담팀 신설

**다. 조기정착 지원방안**

- 정착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 및 생활실태 자료를 확보하여 관리
  - 중장기계획 수립
  - 개인별 DB 구축
  - 하나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여성 사업 추진
- 지역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정착지원 정책
  - 언어 - 발음 - 억양 교육 프로그램
  - 정착담당관 내지 도우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북한이탈주민여성
  - 심리전문상담사의 지속적인 지원
  - 정보 제공지 발행
- 자녀양육이나 교육지원
  - 아이돌보미 제도 활용
  - 자녀진학 등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 북한이탈주민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현대사 탐방 프로그램
-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적 역량강화
  -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의 도입
  - 직무소양교육 내지 의식교육 강화
  - 인턴제도 도입
  - 적합한 직종 개발

**정착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보호'에서  
 '자립·자활'로...  
 성인지적 관점서  
 북한이탈주민여성의  
 현실 고려한 총체적 정책  
 수립해야**



- 체계적, 전문적 창업지원 구축
  - 체계적인 창업지원 교육 및 지원시스템
  - 창업자금의 지원
  - 창업보육 및 창업부스 등 인큐베이팅 활성화
- 각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사업체마다 1사 1인 채용
- 지자체별 북한이탈주민여성을 위한 종합 지원 One-Stop System 구축
-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
- 사회적 인식 개선
  - 인식전환을 위한 시민교육
  - 멘토-멘티 사업 활성화
  - 안정적인 조기정착사례 발굴 및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